

行 政 自 治 部

行政自治部

1. 總 括

지시사항 건수		완 료	관리종결	추진중		미 착 수	비 고
				정 상	부 진		
총 계	66	43	1	22	-	-	-
단독주관사항	38	23	1	14	-	-	-
공동지시사항	28	20	-	8	-	-	-

2. 指示事項 目錄

○ 完了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12	09-36-01	행사 간소화 방안마련	1998. 6.30
52	08-36-02	공무원 부정비리 엄단조치	1998. 6.30
61	08-36-03	정부부문의 정보화 책임관제도 도입	1998.12.31
120	08-36-10	공직사회의 변화와 체질개혁 추진	1999. 3.31
121	08-36-06	정부 구조조정 추진	1999. 6.30
139	08-36-08	지방행정감사 중복 개선	1999. 3.31
151	08-36-09	대형사고 예방노력 강화	1999. 3.31
166	08-36-10	이중과세 문제의 적극적 해결	1999. 3.31
173	08-36-11	효과적인 공무원포상 실시	1999. 3.31
185	08-36-12	의미 있는 국경일행사 기획	1999. 9.30
204	08-36-13	경찰개혁안 마련	1999. 9.30
211	08-36-1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1999. 9.30
213	08-36-18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검토	2000.11.25
242	08-36-17	경기도 지청 설치 검토	2000. 2.25
250	08-36-19	공직기강 확립 대책	1999. 9.30
266	08-36-20	한자병기 실시	1999. 9.30
272	08-36-22	유사시 대피훈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철저	1999. 9.30
299	07-36-24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00. 7. 1
300	07-36-25	전자민주주의 시대 선도(인터넷)	2000.12.31
333	03-36-2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2001. 4.30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335	08-36-29	ASEM 행사 대비철저	2000.10.21
459	08-36-33	효과적인 폭설피해 보상방안 강구	2001. 4.30
491	08-36-39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처	2001. 5.30
10	03-70-01	실업문제 세부대책 수립·추진	2000.12.31
48	08-70-03	국정홍보의 강화	2000.12.31
137	03-70-08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1999. 6.30
138	08-70-09	수해복구 만전	1999. 6.30
149	05-70-10	실업대책 내실화	1998.12.31
153	03-70-11	Y2K대책 철저 점검	2000. 3.31
157	09-70-12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경감노력	2001.12.31
158	03-70-13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강구	1998.12.31
175	08-70-16	공정한 인사행정	1998.12.31
264	08-70-25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2000.12.31
282	08-70-29	2000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2000. 1.31
304	08-70-32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2000. 4.30
328	08-70-33	해빙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	2000. 4.30
332	08-70-34	공정한 선거관리	2000. 4.14
352	07-70-36	전자정부 조기구현	2001. 8.10
366	09-70-39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내용의 철저한 실천	2000.12.13
367	09-70-40	정부기능 조정추진	2000.12.31
386	03-70-45	공기업감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2000.12.26
410	08-70-50	설 종합대책 마련	2001. 1.31
541	08-70-60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2001.12.31

▲ '98 - '00년 완료사항은 「1998년 -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참조요망

○ 管理終結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212	08-36-15	과거 소액금품 수수에 대한 관용 조치	

○ 推進中인 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78	08-36-0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시대의 정착	정 상
133	08-36-07	지방자치단체의 능력향상 지원강화	"
246	08-36-18	국민 화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	"
271	08-36-21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	"
285	08-36-23	지진대비책 수립	"
324	08-36-26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
334	08-36-28	퇴직공무원 대책 마련	"
364	08-36-30	각종 사고방지대책 강화	"
378	08-36-31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
401	03-36-32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개혁추진	"
486	08-36-34	일선의 부정부패 척결	"
488	08-36-36	지방재정의 건전화방안 강구	"
489	08-36-37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도강화	"
490	08-36-38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	"
397	03-70-48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정상
422	08-70-51	인사청탁 근절	"
515	03-70-52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관리	"
516	03-70-53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지원	"
520	08-70-56	여성인적자원 개발	"
525	06-70-58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531	07-70-59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543	09-70-61	연말공직기강 확립 등	"

3. 完了指示事項

1) 中小企業 및 小商人 積極 支援 : 333(03-36-27)

가. 指示內容(2000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이나 판로문제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나. 措置內容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추진
 -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 수립 시달(2000.5.20)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운전자금 14,420업체 21,521억원, 구조조정자금 2,938업체 12,97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9,080업체 16,600억원 보증)
 - 공사 선급금(4,879건 19,373억원), 하도급대금 직불(482건 8,037억원) 지원
-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2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2000.12)
 - 공유지 장기 임대허용(5년→20년)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 지역업체 가점부여 등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지방상권(재래시장, 소매점포)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8%→5%)
 - 지역건설업 경영애로 해소(지역제한 입찰금액 축소시기 2년연장 등)
 -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2001예산편성 보완지침 시달(2000.11.16)
- 2000년 중소기업육성시책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표창 : 13개기관, 특별교부세 : 10억원

다. 事業成果

- 지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격려

2) 效果的인 暴雪被害 補償方案 講究 : 459(08-36-33)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0일, 제7회 국무회의시)

-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재산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집계됨.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빠른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피해보상지원에 있어 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혜택이 달라야 함. 이번까지는 무허가·비규격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눈속임으로 용자받는데만 관심이 있었거나 법령을 무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차별대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신속한 복구비 지원조치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생업재기를 위해 민·관·군이 합심하여 응급복구 등 조기복구 하였으며
-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였음

<1.7~1.9폭풍설 피해>

- 피해내용 :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659,020백만원
- 복구소요액 : 815,647백만원(국비152,878 지방비49,384 용자등613,385)
- 추진일지
 - 중앙합동조사 : 2001. 1.10 ~ 1.16
 - 복구계획확정시달 : 2001. 1.20
 - 국무회의 : 2001. 1.22
 - 예산배정 : 2001. 1.30

<2.15폭풍설 피해>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재산피해 137,416백만원
- 복구소요액 : 153,890백만원(국비36,887 지방비13,517 용자등103,486)
- 추진일지
 - 중앙합동조사 : 2001. 2.17 ~ 2.20
 - 복구계획확정시달 : 2001. 2.24
 - 국무회의 : 2001. 3.21
 - 예산배정 : 2001. 4.13

□ 보조율 상향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 조치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완료(2차례 개정)
 - 1차개정(2001. 2.3)
 - 농림시설 지원규모 확대 : 1ha미만 → 2ha미만
 - 농림시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 현행 : 국고15%, 지방비5%, 용자60%, 자부담20%
 - * 변경(상향조정) : 국고25%, 지방비10%, 용자55%, 자부담10%

- 농작물 지원단가의 세분화 및 상향조정
 - * 농약대(ha당) : 시설채소 49,940원 → 139,000원
 - * 대과대(ha당) : 일반작물 1,421천원 → 1,575천원, 일반작물 1,421천원 → 2,120천원
인삼 10,451천원 → 10,751천원
- 시설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 김양식시설(책당) 131천원 → 149천원, 자동화비닐하우스(ha당) 217,400천원 → 250,000천원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5%)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5%)

- 2차개정(2001. 4.18)

- 축사시설 지원규모 확대
 - * 국고지원 : 600㎡미만 → 1,800㎡미만, 융자지원 : 600㎡이상 → 1,800㎡이상

□ 농림시설 피해복구 대국민 홍보강화 등

- 농림시설 지원규모 확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지원단가인상에 대한 홍보실시(반상회, 팸플렛)
-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 등도 금회에 한하여 규격 및 적법시설로 설치할시 지원
- 비규격 등 불법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시설 표준규격에 대한 작물별, 지역별 다양한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여 피해농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표준규격시설 보급률 제고

다. 事業成果

- 신속한 복구비지원과 국고보조율·지원단가 인상, 피해시설 조기복구를 통한 피해 농어민의 생업재기 기반을 구축하여 조기 생활안정 도모
- 표준규격으로 복구토록 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 및 피해재발 방지

3) 災害에 대한 徹底한 對處 : 491(08-36-39)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재해는 발생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반복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태세확립 및 계획수립

- 시·도 방재국장 회의시 재해취약시설 사전대비 철저지시 ('01. 2. 13)
- 재해사전대비 추진지침시달 ('01. 2. 20)
- 2001 여름철 재해대책 120일 작전 추진지침 시달회의 ('01. 6. 5)

□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

- 지방자치단체별 재해취약지역 자체점검 실시 및 조치 ('01. 3~5월)
- 재해위험요인 정비 및 방재물자 확보·비축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완료 (8,054개소)
 - 수방자재 6종 1,646만점, 응급복구장비 7종 20천대, 구호물자 7종 27만점, 방역물자 등
- 여름철 재해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8개부처 5개반 50명, '01. 5. 28~6. 2)
 - 발굴된 미흡사항 302건 우기전 정비완료
- 12개 부·처·청장 수해우려지역 현지시찰 ('01. 6. 27~7.9)
- 수해예방 지역책임담당관 현지점검 ('01. 6. 29~7. 1)
 - 행정자치부 지역책임담당관(국장급) 및 담당급 35명, 시·도 및 시·군·구 방재시설 등 현지확인
- 태풍 대비 취약요인 중앙부처 합동점검 실시 ('01. 8. 3 ~8. 10)
 - 7개부·처 27명, 12개 시·도 현지점검

□ 여름철 재해대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재해예방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배포 ('01. 3)
 -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 (20분)」 제작, 관공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1,030개)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보스티커 제작·배포 ('01. 5. 2)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차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부착 (총 48,000매)
- 재해예방포스터 제작·배포 ('01. 6)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배포·게첨 (4,000매)
- 여름철 재해대책 TV4사 홍보방송 제작·방영 ('01. 6. 23~10. 15)
 - 재해예방 홍보방송(1분×4개)을 제작하여 KBS, MBC, SBS, YTN에 총 304회 방영
-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재해예방 홍보동영상 제작·표출('01. 5. 7~ 10. 15)
 - 전국 대도시 지역의 131개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동영상 표출
- 태풍대비 홍보비디오 제작·배포 ('01. 8. 18)
 - 전국 대도시 지역의 131개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동영상 표출

□ 재해취약지역설정 및 경계강화를 위한 지역재해 예·경보제 도입

- 지역재해 예경보제 추진팀 구성('01. 4월)
- 재해발생우려지역 표준대응요령(SOP) 작성('01. 4. 30) 및 지역주민교육실시
- 232개 시·군·구별 재해예경보 대상지역도 작성('01. 5. 24)
-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31개지역)
- 자동음성통보시스템확충·보강 (218개지역)

다. 事業成果

-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추진지침을 수립·시달하여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재해 대비 총력태세를 견지하여 여름철 재해피해 최소화 도모
- 방재장비 및 구호물자를 “최근 10년간 사용량중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확보”토록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대책을 마련
- 국민의 방재의식 제고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V, 대형전광판, 스티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재해예방 홍보활동 전개
-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태세 구축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경보제”를 추진

共通 1) 自然災害 및 人的災害 輕減 努力 : 157(09-70-12)

가. 指示內容(1998년 10월 12일, 제47회 국무회의시)

-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경감을 위한 협력
 - 양국은 양국의 재해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의견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

나. 措置內容

- ☐ 국제 방재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시아방재센터』 설치 (1998, 일본 고베시, 회원국 22)
 - '95.12.17~18 : 아시아 방재정책회의 개최 참가(본부장외 1인)
 - '96.10.23~24 : 아시아 방재전문가회의 개최 참가(방재국장외 1인)
 - '97. 6.16~17 : 아시아 방재협력증진회의 개최 참가
 - '98.10.26~27 : 아시아 방재센터연구원 한국방문(스즈키외 1인)
 - 우리나라 재해대책 관련 조직·예산에 관한 자료수집
 - 아시아방재센터 회원국으로 매년 회의참가 및 부담금(\$30,000) 납부
- ☐ 한·일 방재협력회의 정례화 추진
 - '99. 2.15~18 : 아시아 방재센터 주최 제1차 국제전문가회의 참가
 - '99. 3.17 :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일 국토계획협력회의에 방재분과위 설치검토
 - '99. 5. 8 : 방재분야 협력문제는 양국간 직접협의 (건교부→행자부)
 - '99. 5.15 : 한·일 양국간 방재분야 교류협력회의 설립 의견제시(한국→일본국토청)
 - 매년 한·일 방재회의의 정례적 개최 ('01. 12월 제3차회의 개최)

다. 事業成果

- 한국·일본 등 2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시아방재센터』에 참가하여 각국의 자연재해 정보교환의 통로를 마련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함
- 한·일 방재협력회의의 정례화를 통하여 지리적으로 유사한 한국과 일본간의 방재협력을 위한 정보·기술 교환의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방재행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함

共通 2) 설 綜合對策 마련 : 410(80-70-50)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9일, 제2회 국무회의시)

- 설연휴 기간중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게 됨.
 - 물가관리, 체불임금,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특히, 인명사고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며, 치안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기 바람
-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함
 -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재해재난예방
 - 재난·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사전 점검 : '01. 1. 8~19, 합동점검반 2,150명 편성·점검
 - 시장, 공연·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500여개소 점검
 - 전기·가스·소방위험물 1,661개소에 2,150건 지적, 890건 응급조치
 - 재난·화재상황 관리와 구조·구급태세 강화 : 1.23~26, 878개 소방관서 107천명 비상근무
 - 구급차량 227대 배치, 57천여명 병·의원 이송
 - 화재 취약시설 334천개소 소방순찰, 6,531건 응급조치
 - 유도선 안전운행 지도
 - 185개소의 선착장 사전 점검 및 안전교육 40회 실시
 - 주요 도선장(34개소)에 안전 공무원 51명 배치
- 귀성객 수송관리 : 기상악천후 대비 교통 소통대책 마련 등
 - 상습정체지역 우회도로 326개소 12,814km 지정
 - 사고다발지역 7,005개소 현지 확인 및 입간판 1,101개소 설치
 - 폭설·폭풍대비 비상근무(394개반 5,721명) : 그레이더·덤프 등 장비 3,277대 동원
 - 귀성객 교통편의 제공 : 지하철· 시내버스 연장(새벽 02:00) 및 증편(3,148대) 운행
- 서민생활 보호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 농축수산물·공산품 등 26개 품목 중점관리
 - 1. 8~22기간동안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 운영(시도·시군구 단위 728개 점검반 운영)
 - 총 938회 56천여개 업소 점검, 1,606건 적발, 행정처분 292건, 현지시정 1,109건 등
 - 비상진료체계 구축 : 응급구조인력 확보 및 환자긴급수송체계 확립
 - 당직·당번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진료 실시
(공공의료기관 3,511개소, 병·의원 11,207개소, 약국 25,448개소 지정 총 80,067건 진료)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운영, 각종 의료정보 제공
(병원안내 39,492건, 질병상담 1,148건, 구급차 연결 214건 등)

-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어려운 이웃돕기 및 과소비 자제 : 소외계층 위문 실시
 - 행자부 : 동료 유가족·복지시설 등 32개소 31백만원 지원
 - 시도·시군구 : 불우이웃 151천여명에게 3,015백만원 현금·물품 지원
 - 귀성객 환영 분위기 조성 : 마을단위 환경정비 및 민속놀이 개최 등
 - 농악놀이(575회), 율놀이(2,591), 널뛰기(1,259) 등
- 24시간 비상근무체제 확립
 - 비상근무 체제 확립 : 행자부-시도-시군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행자부는 국장을 반장으로 70명 근무, 시도·시군구 : 연 51,249명 근무
 - 재해·재난상황관리 강화, 청사 등 주요시설 자체 경비 강화 및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연휴기간 중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 : 자치단체별 『시민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 쓰레기, 상·하수도, 제증명 발급 등 생활민원처리

(총 6,077건 접수, 6,039건 처리, 38건 이첩처리 등)

다. 事業成果

- 각종 재해·재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이 되었음
- 지방물가관리, 생활민원처리, 비상진료체계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
-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명절보내기 분위기 확산

共通 3) 가을 가뭄에 積極 對處 : 541(08-70-60)

가. 指示內容(2001년 11월 27일, 제51회 국무회의시)

- 심각한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절수운동이 필요함
 - 아울러 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함. 화장실, 수도꼭지 관리 등을 잘 하면 물 기근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3대강 물관리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
 - 한강관리법은 통과 되었으나 3대강관리법도 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가뭄기간 동안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준설하여 담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하고 소형 댐도 계속 가능한 지역에서 건설해 나가야 함
 - 소규모 천수답은 재배종목을 바꾸어 관정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가을가뭄대책 수립
 - 가을가뭄대책수립을 위한 관계국장회의 개최('01. 11. 17)
 - 주관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 참석 : 행자·농림·산자·환경·건교부·기상청
 - 가을가뭄대책 관계차관회의 개최('01. 11. 22)
 - 주관 : 국무조정실장
 - 참석 : 행자·농림·산자·환경·건교·기획예산처
 - 가을가뭄대책수립 (관계부처 합동)
 - 내용 : 부처별 가을가뭄대책 국무회의 보고(11.27)
 - 행자, 과기, 농림, 환경, 건교부
- 가을가뭄대책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추진
 - 물질약 범국민운동 전개 및 가뭄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시 (행자부 → 시도, 11.30)
 -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물질약 범국민운동 전개
 - 가뭄대책업무 처리지침(S.O.P) 에 의거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수립 시행
 - 가을가뭄대책 세부실천계획 적극 추진 (관계부처 : 12.10)
 - 행자·농림·산자·환경·건교부·기획예산처

다. 事業成果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을 가뭄에 신속히 대응하고 2002년 봄 가뭄에 대비

4. 推進中인 指示事項

1) 中央權限의 地方移讓 擴大 : 78(08-36-04)

가. 指示內容(1999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 중 지방으로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고 중앙정부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함.
- 「지방이양촉진법」을 조속히 제정, 지방이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정('99)
 - 사무의 지방이양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99)
 -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예산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지원단 구성 운영('00)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총 101회 개최, 14개 부처 49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국가→시도·시군구 277, 시도→시군구 214, 시군구→국가 2
 - 현지 여론수렴을 위한 현지회의개최 3회, 현장조사 7회, 전문가 및 관련단체 간담회 2회 개최
-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사무배분표준모델 개발('99)
-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발굴기획단 설치 및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 (97개 단체 1,721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민행정 구현(55,400여건 접수)
- 중앙 및 자치단체 지방이양관련 공무원 전문실무교육 실시(10회, 1,425명)
- 지방의 자율권을 규제하는 기관위임사무 일제조사 (19개 부처 840건)
-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이양 행·재정지원단」구성
 - 1차 회의 개최, 종자관리소관업무 지방이양(인력 50명 및 예산 21억 지원)
 - 2차회의,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인력 및 예산산정 협의 ('01.12.27)
- 위원회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지방이양소식지」발간, 자치단체·중앙유관기관 배포(7,000부)
- 이양확정사무의 법령개정 등 이행 촉구(6회)
 - 차관회의('01.11.10), 국무회의('01.11.27) 이행상황보고

다. 向後 推進計劃

- 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
 -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한 위원회 정기·수시개최
 -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한 현지 회의개최, 현장조사 등 여론수렴 강화
- 지방이양대상사무 대대적 발굴
 - 위원회 중심으로 지방이양대상사무 자체기획발굴 강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지방이양담당자 실무전문교육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제고
 - 「자치단체장 및 의장단협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담당자 실무전문교육
 -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소개·홍보하는 「지방이양소식지」 정기 발간
 - 지방이양 워크숍 개최(하반기)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적극 추진
 - 부처별 현황 : 19개 부처 840개
- 국가특별행정기관 사무실태 조사, 유사·중복기능은 최대한 자치단체로 이양
- 이양확정사무 사후관리 철저
 - 이양에 따른 인력·예산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지원단」내실 운영
 - 이양사무에 대한 이행실태 정기점검, 이행촉구로 이양효과 제고
 - 2003년 「지방이양일괄법」제정검토

2) 地方自治團體의 能力向上 支援強化 : 133(08-36-07)

가. 指示內容(1998년 8월 4일, 제34회 국무회의시)

-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권한을 주지 않고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없으며 우수한 인재들도 확보되기 어려울 것임.
-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기획 및 업무능력이 조속히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도 추진해야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개방형전문직위제 도입 ('98.2.20,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계약직공무원 제도개선('98.9.19, 지방공무원법 개정)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창조적 사고혁신과정" "변화촉진자 과정" 등 설치 운영
 - 시·도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과정 운영
- 시·도 교육원에 "정책기획과정" 설치 운영
 - 시·도별 1~2회 실시
- 민간전문가의 계약직교수요원 활용근거 마련
 - 지방교육훈련법 개정('98.12.31)
- 공직부패방지등 공직윤리강화 실시 (2000 정부시책과제)
- 지방고등고시 시행 : '98 : 44명, '99년 : 27명, '00년 : 27명, '01년 : 27명
- 개방형직위제 도입근거 마련(2000.12.29 지방공무원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2001.6.30)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제정(2001.7.12)
- 서울시 9개직위, 충남·북 1개직위, 직위지정 협의 및 직무수행요건 협의 완료(2001.12)

다. 向後 推進計劃

- 개방형직위제 직위지정 및 직무수행요건 협의(상시)

3) 國民和合을 위한 積極的 努力 : 246(08-36-18)

가. 指示內容(1999년 5월 4일, 제16회 국무회의시)

- 국민화합은 마치 영·호남간의 교류시책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민화합은 범국민적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함.
- 각 부처가 국민화합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이를 행자부가 통합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국민화합 추진계획 보고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국민화합 추진상황 차관회의 보고('99.10.14)
- 중앙부처 국민화합추진
 - 재정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에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추진
-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국민화합분야 선정 지원(183개단체 21.3억원 지원)
 - 중앙(행자부) 29개단체 12.5억원 지원
 - 지방(시·도) 154개단체 8.8억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민화합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
 - 자치단체장·의회 중심 교류활동(1,497건)
 - 경제·사회단체교류
 - 영·호남 어업인후계자 연합회 개최 등(1,352건)
 - 학생·청소년 등 교류
 - 영·호남학생 광주 민주성지순례 등(892건)
 - 지역공동개발사업
 - 구례-하동간 영·호남 화합의 다리 등(91건)
 - 우수시책 사례발굴 전파
 - 지방자치단체 국민화합 우수시책 토론회 개최('99.11.4~5)
 - 기타(이벤트행사 등)
 - 미혼남녀 만남의장, 연극공연 등

다. 向後 推進計劃

- 중앙부처의 국민화합 추진체계 강화
- 영·호남 위주에서 전지역간 교류, 계층간 노사간 교류 등으로 추진방법 전환
- 일회성·행사성 위주에서 제도적 생산적·화합시책으로 전환
-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사례 철저한 단속 강화

4) 化學武器 使用에 對備한 防毒面 確保 : 271(08-36-21)

가. 指示內容(1999년 8월 19일, 을지연습 종합보고서)

-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고 적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방독면 보유율이 3%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임
- 방독면을 소지하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므로 방독면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98~2007)을 수립('98)
 - 방독면 보급계획량 1,991만개(정부지원보급 506만개, 자율확보 1,485만개)
 - 정부지원보급 : 민방위대원 · 화학공단주민 등에 506만개(총25,943백만원 국비 소요)
- 2001년도 보급사업 추진
 - 방독면보급 활성화시책 수립(2001.1) : 505천개 보급
 - ※ 2001년까지 총 413만개 보급(총대상 2,253만개의 18%)
- 화재시등 평시활용 가능한 다용도방독면 개발 · 보급 추진(2001)
 - 서울시 등 5개 시도 51억원의 예산으로 433천개 보급

다. 向後 推進計劃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의 지속적 추진
 - 2002 보급계획량 : 530천개(27억원)
- 『다용도방독면』자율보급제도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홍보
 - 화재 등 취약지역에 다용도방독면 자율보급 권장
 -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지급, 판매소 · 전시대설치 등 홍보 강화

5) 地震對備策 樹立 : 285(08-36-23)

가. 指示內容(1999년 10월 4일, 제39회 국무회의시)

- 지진대비책 수립
 - 최근 터키·대만·멕시코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함
 - 우선 모든 건물이 내진설계기준이 적합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하며, 특히 송·변전소, 통신시설 등이 내진 설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임
 -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는 법령 정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대책을 포함하여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96.11) 및 보완 (3회: '98. 5, '99. 9, '00. 3)
 - * 지진방재종합대책은 관계부처에서 관련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 타이완지진을 계기로 현행 대책 보완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99. 10. 4)
 - 지진대비 경제부처 실무조정회의 (관계부처 1급) 개최 ('99. 10. 25)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협의조정 ('99. 10. 29)
 - 각 부처 지진방재계획 수정안 최종보완(과장급 회의) ('99. 12. 8)
 - 정부지진방재종합계획 보완계획 차관회의 ('99. 12. 23)
 - 지진방재종합대책 보완 ('00. 3. 2)
 - 지진방재종합대책 실무회의 개최 ('99. 12. 13, '01. 2. 6)
 - 지진방재 전담조직 설치관련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01. 4. 12)
 - 지진방재 조기대응시스템 구축회의 ('01. 6. 19)
 -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01. 11. 23)
- 내진설계기준 정비·강화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조사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확대 (기존 20개→6개시설 추가)
 - 소관부처별 법령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추진(입법예고 완료)
 - 내진실태조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00. 3. 17)
 - 『내진실태조사표 및 작성요령』 작성·통보 ('00. 6. 10)
 - 조사표(건축물, 교량)를 관계부처 및 시도에 배포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 2000~2004까지 소관 부처별로 추진
-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
 - 2000~2005까지 기상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진 (92개소 240대)
- 지진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진방재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훈련실시

- 지진방재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회 1,034명 ('99. 12. 13, '01. 12. 14)
- 내진실태조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1회 798명 ('00. 11. 21)
- 지진대비 도상훈련실시 (방재전산훈련 연계) : 2회 ('00. 5. 19, '01. 5. 9)
- 지진대비 실제훈련실시(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 2회 ('00. 4. 21, '00. 9. 20)
-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발간·배포
 - 중앙, 자치단체, 방송, 신문사, 대학교 등 3,158개기관 3,300부 배포 ('00. 12. 2)
 -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및 중학교 3,726개 학교 4,000부 배포 ('01. 3. 15)

다. 向後 推進計劃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추가지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02. 3월)
- 내진설계기준 정비·강화 및 시설물 실태조사 ('02. 1~12월)
- 지진방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02. 11월)
- 지진방재 훈련실시 ('02. 5~9월)
-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 추진 ('02. 1~12월)
- 지진방재종합대책(안) 수정·확정 ('02. 12월)

6) 大型事故의 事前豫防 : 324(08-36-26)

가. 指示內容(2000년 2월 22일, 제8회 국무회의시)

-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 여의도 공동구 화재는 평소에 철저히 점검했다면 막을수 있는 일이었음
 -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 추가지시(2000년 10월 4일, 제40회 국무회의시)
 -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 동절기 화재대비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을 세워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공동구 관련 소방법령 정비 : 완료
 - 소방법(2001. 1. 26 개정), 소방법시행령(2001. 3. 20 개정), 소방법시행규칙(2001. 7. 27개정)
- 대형화재취약대상·지하공동구 점검 : 완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5,023개소 점검, 1,375개소 1,510건 불량사항 개선조치
 - 지하공동구·단독구 660개소 점검, 4개소 불량사항 개선조치
- 화재예방활동 강화 : 완료
 - 취약지역 소방순찰 153,391회, 중요 취약시장·백화점 등 철시확인 105,099회 실시
 - 취약지역 당직자에게 안전관리 당부전화 345,926회 실시
 - 소방서장 소방관계인에게 서한발송 279,728 개소,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 간담회 686회 실시
- 화재취약대상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표 비치 및 검사실명제 시행 : 계속
 - 노래방, 단란주점 등 89천개소 안전점검표 비치
 - 225천개소 소방검사 실명카드 교부
- 주택·아파트 무료안전점검 : 계속
 - 188천세대 무료안전 점검 9,719세대 소화기, 유도표지 등 수리, 교체실시
 - 371,411명 화재예방교육 실시

다. 向後 推進計劃

- 화재취약요인의 사전점검·불안전요인 제거로 월동기 화재예방
- 소방안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국민안전의식 제고
- 소방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소방인 저변확대 소방안전문화 정착
-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표 비치 및 검사실명제 시행
- 주택·아파트 무료안전점검

7) 退職公務員 對策 마련 : 334(08-36-28)

가. 指示內容(2000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취업훈련 등을 통해 퇴임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2000.5.19)
-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교육비 등 지원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01년 19억원, 02년 17억원)
- 퇴직공무원인력은행 구축 및 운영(2000.8.2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개설
 - 2001.12.31현재 구직등록 413명, 재취업지원 44명
 -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과 연계운영
 - 중앙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인력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01.7)
- 퇴직공무원인력은행 보완(00.12~01.1)
 - 재취업 지원외에 자원봉사 항목 추가
 - 민관 취업관련사이트와의 자동연결기능 구축
 - * 각급기관(532개 기관) 홈페이지와 퇴직공무원 인력은행간 자동연결기능 구축
- 취업관련교육 실시 및 홍보 : 00년도 208명, 01년도 1,555명
 - 교육과정 : 자격증취득, 창업, 영농, 취미부업
- 퇴직예정공무원 지원대책관련 지역설명회 개최(2회 / 01.6, 01.11)
 -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업무담당자
- 퇴직(예정)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로 교육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시 교육 입교자(11회)
- 취업관련교육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2002년도 영농교육이수자를 위한 주말농장 등 현장실습장 지원(2002 예산에 반영)
- 퇴직예정공무원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 안내책자 발간배포(01.12)
 - 내 용 : 각급 공무원교육기관과 각급대학 평생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홈페이지 등 안내
 - 배부기관 : 입법·사법·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2002년도 취업관련교육 수요조사 실시(01.12)
 - 대상기관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취업정보안내교육 1회 실시(01.12)
 - 목 적 : 재취업의지가 강한 퇴직공무원에게 취업정보 안내 등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대상 및 기간 : 인력은행구직등록자중 희망자 85명, 1박2일
- 행정기관내 퇴직공무원 활용가능분야 발굴·지원
 - 행정기관내 활용 5,255명

다. 向後 推進計劃

- 퇴직공무원 취업관련교육 및 재취업 지원 지속 추진
- 영농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장 지원 추진
-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구직등록자중 희망자에 대한 취업안내교육 실시 등

8) 各種 事故防止對策 強化 : 364(08-36-30)

가. 指示內容(2000년 5월 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수준으로 이러한 오명을 씻도록 해야함.
- 과속·음주운전 등은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해야함.
-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인명존중정신을 함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2001년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5.6명으로 목표(6.5명) 초과 달성
- 매월 교통기초질서 분야중 한가지 테마를 선정, 집중적으로 캠페인 및 단속 전개
 - 3월 : 끼어들기 안하기, 4월 : 안전띠 착용 생활화, 5월 : 사업용차량 단속, 6월 : 끼어들기 안하기, 7월 : 이륜차 단속, 8월 : 전세버스 단속, 9월-10월 : 교통문화 개선, 11월 : 휴대폰 단속
- 음주운전 단속
 - 경찰청 주관 주2회 일제단속, 지방청 주관 주1회 단속, 경찰서 주관 매일 단속
 - 상반기 총 150,691건, 하반기 총 165,073건 단속
- 과속운전 단속
 - 이동식 무인단속 주·야간 2시간씩 1일 4시간 운용
 - 상반기 총 4,752,679건, 하반기 총 4,810,253건 단속
- 교통 캠페인 실시
 - 매월 첫째주 화요일 경찰서별 주요 교차로 등 혼잡지역
 - 상반기 총 371,608명, 하반기 총 131,077명 참여
 - 각 지역별 교통 캠페인 생방송 인터뷰 등

다. 向後 推進計劃

-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 국민의식 대전환
- 매월 1회 질서월드컵의날 교통캠페인 전개
- 안전띠 착용 생활화 범국민운동 전개
- 매월 15일 교통단속 없는날 시행
- 교통사고 요인행위 중 사업용차량의 과속행위 집중단속 실시

9) 安全事故 再發防止 : 378(08-36-31)

가. 指示內容(2000년 7월 18일, 제30회 국무회의시)

- 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중 대형사고를 당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교통단속 강화
 - 교통경찰, 파출소 112순찰차, 고정식·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등 가용경력·장비 최대 활용, 주요 국도 등 사고 잦은 지역 순찰·단속 강화
 - 음주운전,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행위 중점 단속
- 사고 다발 지점 경찰서별 도로안전진단제 실시,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감소 효과 거양
 - 전국 경찰서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사고 잦은 지점 425개소 선정, 시설개선 및 특별관리
-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주력
 - 학생 200명 이상, 대형버스 5대 이상 동시 출발시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순찰차로 호송 실시
 - 11월말 현재 87,844대, 학생 3,621,412명 호송
-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도로개선 및 사업용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건교부)
 - 수학여행단 이동시 사전 경찰에 교통관리 요청(교육부)

다. 向後 推進計劃

- 사고 다발지점 안전진단 지속적 실시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주력
- 수학여행단 이동시 시·도 교육청과 협조 최소 5일전에 에스코트 신청토록 홍보
- 사고발생시 안전띠 착용유무 보도를 통해 안전띠착용의 중요성 홍보

10) 地方公企業 構造調整 改革推進 : 401(03-36-32)

가. 指示內容(2000년 9월 28일, 충청남도 순시시)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개혁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마무리
 - 부실지방공기업 정리 14개법인 : 통·폐합(3), 청산(5), 민간위탁(3), 기타(3)
 - 지방공기업 인력감축완료 6,429명(계획대비 31명 추가감축)
 - 경영혁신 제도개선 도입
 - 연봉제, 성과급제, 명예·조기퇴직제, 정년퇴직, 퇴직금지급율조정 등
- 신설공기업 운영실태 점검, 경영혁신 추진
 - '99. 4월이후 신설공기업 30개 점검, 인력 21명 감축, 9개법인 상임이사 제도폐지
 -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경영혁신제도 도입완료
- 경영혁신 이행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인건비 집행지침 시달(2001. 2)
 - 지급시기 : '01년 3월, 10월(2회), 지급율 : 총인건비의 2% (각 1%)
- 책임경영 체제구축
 - 직영기업 경영평가확대 : 132 → 162개 공기업
 - 경영진단실시 : 12개 공기업진단, 인력 276명 감축조치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강화 통보(2001. 5)
 - 공개채용 확대, 설립타당성 검토 강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다. 向後 推進計劃

- 부실공기업 정리 및 인력감축으로 비용절감효과 2,118억원,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 (33 → 39백만원), 매출규모 증가 14.2% 향상
- 신설공기업(30개법인) 운영실태 점검, 인력 21명 감축, 연간 5억5천만원 인건비절감
- 관주도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항시 자율경영혁신 추진체제로 전환

11) 一線의 不正腐敗 剔抉 : 486(08-36-34)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국민의 정부들어 권력형 비리는 없어졌으나 일선창구의 부정부패가 잔존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것이 해결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행정업무를 가능한 한 인터넷으로 처리해 국민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직접접촉을 하더라도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감찰 활동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임
-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도덕적 자각심을 향상시키는 공무원 자체교육이 중요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
 - 인사, 계약, 소방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4개팀 50명으로 구성·운영
 -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대민접촉 기회 차단 및 위험물 허가규제의 투명성 강화 등 성과
- 부패방지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육 강화 지시(2001.3.9)
 - 2001년도 상반기 136,136명 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원 : 87개 과정 15,812명, 특별정신교육 264회 120,324명

다. 向後 推進計劃

- 일선행정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전자입찰제 도입 확대로 부패 환경 척결
 -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강화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도덕적 자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

12) 地方財政의 健全化方案 講究 : 488(08-36-36)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사태를 막지 못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만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연계시켜 증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자치단체 건전재정 유도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적용 확대
(’01년 11개 → ’02년 13개 항목)
 -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 6개항목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 7개항목
 -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2001.12월)
- 법령위반 등 불건전 재정집행시 자치단체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일정규모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페널티제」 도입
 - 사전승인 없이 지방채발행 지출
 -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한 예산편성 지출 등
 -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01. 12월)

다. 向後 推進計劃

- 심사위원회 구성 등 재정페널티제 시행 세부절차 마련

13) 自治團體間 協力事業 發掘 및 指導強化 : 489(08-36-37)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로 대립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도록 유도해 주기바람
- 부산과 경남의 경마장 건설문제 대립 해결사례라든가, 낙동강 물관리 대책에 대한 해결 과정,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의 생활쓰레기·하수 교환처리 합의사례 등 좋은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윈-윈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기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광역행정 활성화 지침 수립·시달('01. 8)
 -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대책(직권상정제 적극활용, 분쟁의 체계적 관리 등)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협력사업 일제조사, 사무위탁 강화)
 - 행정협의회 운영강화(년 2회 이상개최, 협의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및 우수사례 배부('01. 6, 총 127건)
 - 물관리 21, 하수처리 15, 폐기물 21, 지역개발 34, 기타 36
- 광역행정 추진실적 평가('01. 11, 합동평가와 연계 실시)
 - 분쟁조정기능 추진상황, 협력사업 추진실태('02. 1월중 평가결과 환류)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활성화(중앙분쟁조정위원회 6회 개최, 접수된 6건 모두 해결)
 - 각하 : 2건
 - 아산국가공단 항만개발 관련 행정구역 분쟁(경기 평택시-충남 당진군)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잡종재산 인계 분쟁(인천 계양구- 경기 김포시)
 - 결정 : 2건
 - 의정부 경전철 역사건립비 부담 분쟁(서울시-경기 의정부시)
 -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분쟁(경기 평택시-충남 아산시)
 - 실무조정 : 2건, 실무협의를 통해 당사자간 협약체결을 유도하여 취하신청
 - 자동차액화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분쟁 2건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활성화(행정협의조정위원회 2회 개최, 접수된 2건 해결)
 - 취하신청 : 1건
 -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손실보상 분쟁(환경부-서울시)
 - 결정 : 1건
 - 개야도 어업권손실보상 분쟁(건교부-전북 군산시)

다. 向後 推進計劃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주기적 개최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중 장기간 미해결 분쟁에 대해 직권상정 등 해결방안 강구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항 적극조정
- '01년도 광역행정 추진실적 분석('02. 2월중, 분석결과 시도 시달)
- 광역행정 담당자 연찬회 실시(시·도 담당계장 및 담당자)
 - 시 기 : '02. 2월중
 - 내 용 : 광역행정추진지침 시달, 갈등·분쟁조정 기법 등 토론, 시·도별 우수사례 발표 등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증대방안 연구
 - 시 기 : '02. 3월중(연구기간 4개월정도)
 - 방 법 : 연구용역시행(한국행정지방행정연구원)
 - 내 용 : 관련제도 개선 및 협력사업별 세부 매뉴얼 작성

14) 地域經濟 活性化 全力 : 490(08-36-38)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올해를 지역경제 발전의 해로 설정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람.
- SOC사업 재원을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재래시장의 현대적 개발과 주택개량 사업의 실시를 통한 지역건설업 진흥에 힘쓰기 바람.
-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창업기반시설 확충, 세계금융지원, 민자 및 외자유치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확정(3.22, 11.1, 총 61개사업, 특교세 69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지침 수립, 시·도 시달(3.24, 11.1)
 - 사업장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개시(4월, 11월)
 - 시책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평가(6월말)
 -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시달(8. 9)
 -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추진독려 조치(9월중)
 - 사업추진상황 현지확인 점검(10.18~30)
 -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시 추진철저 지시(10. 17)
 - '01. 12월현재 전 사업장 정상추진(지방비 확보완료)
- 지역 중소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실시(2.22~3.5), 유공기관·공무원 포상, 상사업비(10억원) 지원
- 지방물가 안정관리
 - '00하반기 및 '01상반기 지방물가관리 평가 실시 및 우수기관 표창(1.15~27, 7.30~8.18, 특교세 5억원 지원, 28개 자치단체)
 - ※ '01년도 소비자물가관리 목표(당초 4%→4.3% 시현)
- 지방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개년 사업 추진
 - 재래시장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특교세 200억원)
 - 대상사업확정 추진(47개소, 600억원)
 - ※ '01년도 200억원, 23개시장
 - 재래시장별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평가(6월말)
 -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시달(8. 9)
 -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추진독려 조치(9월중)
 - 사업추진상황 현지확인 점검(10.18~30)
 -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시 추진철저 지시(10.17)
 - '01. 12월현재 전 사업장 정상추진(지방비 확보완료)
- 지역경제 전담과 설치(6.30)
 - 3개계 14명 (지역경제담당, 지역지원담당, 실업대책담당)

다. 向後 推進計劃

- '01년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의 마무리
- '0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속 발굴추진
- 지방재래시장 기반확충 3개년 계획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조기 마무리

共通 1)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불법폭력시위 대응체제 확립,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 엄격적용
 - 무최루탄 원칙 고수
 - 여경기동대 운용, 시민참관단 운용
 - 공권력확보방안 수립 시행
- 불법파업·노사분규 엄정대처로 법질서 확립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 단순 불법행위는 사측의 고소·고발 받아 사후 사법처리
 - 불법폭력분규시 적기 경찰력으로 대응, 주동자 의법조치
- 진압역량강화
 - 집회시위관리지침 CD제작(총 2,300개 제작, 전국 경찰관서·부대 등에 배부)
 - 상설부대 상·하반기 특별훈련(상설 234개중대, 여경기동대)
 -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 특별훈련 실시(25개중대, 중대당 40시간)
- 집회시위 경비지침 하달
 - 노사분규업체, 과격노조원의 시설점거·농성에 대비 지침 총 13회 하달
 - 집회시위 관리지침 책자 제작·배부(총 1,000여부)
 - 안전관리 강화 비디오테이프 제작·배부(총 600여개)

다. 向後 推進計劃

-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체 및 시설에 대한 공권력 진입계획을 사전 수립, FTX 실시
- 불법폭력 대응역량 강화
 - 행위유형별 신진압전술 개발·보급
 - 고무방패, 소형살수차 등 새로운 안전진압장비 도입 추진
- 불법행위자 엄정한 사법조치
 - 주동자·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 구속수사

共通 2)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6일, 국무회의시)

-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아직도 인사청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2001. 3~4)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의견조정
 - 인사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01. 3. 29)
- 인사쇄신책과 인사운영실태 발표(인사위, 2001. 3. 16)
 - 인사운영 실태평가
 - 주요 공무원의 인사통계 발표 등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수립·시행(2001. 4. 7)
 -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관련
 - 인사청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구 등
 - 국민대화합 실현을 위한 편중 인사 시정
 - 주요직위 및 정책라인에 지연·학연 등에 의한 편중인사 지양
 - 분야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중앙부처 인사관계관 회의개최(2001. 7월, 11월)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의 적극 추진 요청
- 인사운영 혁신지침 시행에 따른 각부처 인사운영기준 수립·시행 (2001. 6~12월)

다. 向後 推進計劃

- 각부처 인사운영 기본계획 종합·분석(2001. 12~2002. 2월)
- 각부처 인사운영 강화지침 시달 (2002. 1월)
- 각급기관 인사운영 사례분석 및 수범사례집 발간(2002. 3~6월)

共通 3) 地自體 財政浪費 徹底管理 : 515(03-70-52)

가. 指示內容(2001년 4월 16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내년엔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정낭비의 가능성이 큼
-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유치 등 전시성행사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지방재정건전화와 연계한 재정지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운영 강화(규칙개정 4월)
 - 10억이상 행사성사업을 중앙심사에 포함
 - 기초자치단체 심사범위 축소(50억미만 → 30억미만) 등
 - 시·도 투자심사위원수 확대(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9월)
- 건전재정 인센티브 적용규모 확대('00: 8종 → '01: 11종 → '02: 13종)
 - ※ '02확대 항목 : 지방세 체납축소, 지방세 세원발굴
- 재정페널티제 본격도입(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01. 12월)
 - 위법한 재정행위의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감액
- 기존채무 감축 상환재원 확보 및 신규채무 억제승인 기준보완('01. 1월)
 - 감채기금 조성액 : 1조 191억원(조기상환 1,771억원)

다. 向後 推進計劃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평가 매뉴얼 개발
- 감사원 지적사항 등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개정
- 심사위원회 구성 등 재정페널티제 시행 세부절차 마련
- 지방채승인 심사기준 법제화 추진 등

共通 4) 地方自治團體 特性에 맞는 事業開發 支援 : 516(03-70-53)

가. 指示內容(2001년 4월 16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행을 쫓아 모두 IT나 BT사업 등 첨단산업만 유치하고 육성하려고 함.
- 이는 중복 투자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성공하기도 어려움.
- 각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확정(3.22, 11.1, 총 61개사업, 특교세 69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지침 수립, 시·도 시달(3.24, 11.1)
 - 사업장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개시(4월, 11월)
 - 시책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평가(6월말)
 -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시달(8. 9)
 -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추진독려 조치(9월중)
 - 사업추진상황 현지확인 점검(10.18~30)
 -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시 추진철저 지시(10. 17)
 - '01. 12월현재 전 사업장 정상추진(지방비 확보완료)
-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 실시(2.22~3.5) 유공기관·공무원 포상, 상사업비(10억원) 지원

다. 向後 推進計劃

- IT·BT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610억)
 - '0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선정 및 추진지침 시달('02. 1월중)
 -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등 지식기반시설 확충·지원
 - 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업용수 등 산업활동 여건 조성 등
- '01년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의 조기 마무리 대책마련 추진

共通 5) 女性人的資源 開發 : 520(08-70-56)

가. 指示內容(2001년 4월 18일, 여성부 업무보고서)

-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부가 여성관리직 양성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을 발탁하려고 해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발탁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계획 통보(중앙 및 지방, 01.4)
 - 중앙 및 지방 관리직 여성 DB 구축(01.6, 6,300여명, 전직렬)
 - 시·도·부단체장 회의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실태보고 및 확대권고(01.10)
 -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3.2%(98)→ 3.4%(99)→ 3.7%(00)
 - 기초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평가(01.11)
 - 시·군·구별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부여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추진
 - 여성채용목표제 2002년까지 지속 실시
 - 여성합격률(01) : 행정고시(25.3%),외무고시(36.7%) 7급공채(16.0%),9급공채(38.2%)
 - 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직홍보배너 설치(01.4)
 -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2001년도 정부위원회 관리 및 운영지침(01.4)
 -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현황조사(01.6) 전체 25.8%
-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및 경쟁력 강화
 - 양성평등의식 독립과정 설치 추진
 - 남녀평등의식 교육과목 포함 및 독립과정 신설 협조(01.1)
 - 평등의식교육 독립과정 설치(서울시공무원교육원) : 1주, 60명, 5급이하 남녀공무원(01.4)
 - 국공립연수기관 남녀평등의식교육 운영 실태조사(01.5)
 - * '00년 전교육과정의 16.2%가 남녀평등의식 과목 설치
 - '02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01.11) : 남녀평등의식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적극 개설토록 함
 - 여성공무원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 교육
 - 여성관리자능력발전과정(중앙공무원교육원) : 1주, 30명, 중견관리자(4월)
 - 여성잠재력개발과정(연수원) : 1주, 40명, 지방5·6급(3월)
 - 여성관리자과정(연수원) : 1주, 40명, 지방4·5급(4월)
- 여성공무원 정보네트워크 운영
 - 관리직 여성공무원 전국대회 개최(01.6, 세종문화회관, 165명)

다. 向後 推進計劃

- 여성채용목표제 효율화 방안 및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제도의 보완·개선방안 강구
- 현직 여성공무원의 고위직·관리직 육성확대방안 지속 추진
 - 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능력개발·모성보호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 평등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체 공무원 평등의식 제고 노력 집중 추진

共通 6)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가. 指示內容(2001년 5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시)

- 이번 월드컵은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전세계인의 축제로 관광, 체육시설, 문화행사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한국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
- 21세기 한국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넓혀 나감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높혀 나가야 함.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 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국가적·민족적 이미지도 크게 제고 될 것임. 월드컵은 국민단합의 계기도 될 것임. 월드컵을 계기로 스페인은 지역색을 극복하였고 프랑스는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이겨냈음
-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수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월드컵지원업무 창구의 일원화
 - 월드컵 전담부서 발족(2001. 6. 18)
 - 부서명 : 행정자치부 「월드컵·AG지원단」 발족 - 차관직속
 - 구성(5명) : 총괄기획과장, 사무관2, 6급이하2 → 2002. 1 사무관1명 보강
-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친절·질서·청결운동의 대대적 전개
 -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 운영(8회), 연인원 757만명, 12만톤 오물수거
 - 전국 48개 피서지·행락지 질서 및 쓰레기 처리실태 일제 점검(8/10~9/29)
 - 추석맞이 범국민 대청결운동(9/24~9/29)
 - 단풍철 행락질서 등 계기성 청결운동 대대적 전개(3월~11까지 2천만명, 80만톤 수거)
 - ※ 16개시·도 사회질서 및 친절·청결 평가(01.7.3~7.7) 실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10억8천
- 월드컵대비 4대 시책 24개 실천과제 확정
 - 과제별 추진일정계획, 세부추진상황 작성, 자치단체, 문민협, 관계관 회의개최→역할분담
 - ※ 시·도 행정계장 회의(01.9.14) 및 직능단체 관계관 회의(자하철 1회, 직능단체 3회 등)
 - 문화시민에티켓 제작 부착 : 총 388,944매
 - 철도8,000, 지하철12,500, 음식점210,882, 목욕탕5,722, 숙박시설119,404, 공원3,010, 화장실29,426매
 - ※ '02. 2월중순 사회질서 및 친절·청결 평가 실시 :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 개최도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책 강구
 - 개최도시실무협의회 및 현지점검 등을 통해 95건 접수(해결 26, 추진중 69건)
- 월드컵개최도시실무협의회 구성(2000.8.7)
 - 월1회 개최도시별로 순번 개최(울산, 서울, 대구 개최)
 - 주의제 및 수범사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선정 발표 및 토론
- 월드컵대회 예산 및 인력지원 현황
 - 예산지원 총괄 : 1조 1,233억원
 - 지방채발행 승인 : 8,376억원, 진입로 확포장(양여금) : 1,532억원

- 진입도로개설 및 준비캠프 확충 등 : 1,228억원
- 월드컵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지원 : 100억원
- 인력지원 총괄 : 476명
 - 국가공무원 : 179명, 지방공무원 : 297명
- 월드컵 국민참여 붐조성 행사 지원
 - 고전축구와 사물웅원 재현(10개 개최도시 특별교부세 3억 지원)
 - 개최도시 이벤트 지원(사물웅원 구성 및 연예인 섭외 등)
 - 전중앙부처, 관공서, 국영기업체 월드컵엠블럼기 일제히 게첨('02.1.2)
 - ※ 이후 가로변 등 계양 확대 유도

다. 向後 推進計劃

- 월드컵개최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 사업지원
 - 경기장주변 진입도로, 하천정비 등 가로경관 조성
 - 월드컵 종합관광 안내소·지역 홍보관 건립 등
- 선진문화의식 제고
 - 문화시민의식 함양교육 및 교육교재 발간 : 개최도시 문화시민의식 조사 공표
 - 월드컵 「문화시민대상제」 시행 : 문화시민운동 분야별 수범자 및 우수사례발굴 시상
 -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운동 등 지속 추진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일제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
 - 계기별(봄맞이, 피서철, 추석철, 단풍철, 연말년시) 사회질서유지 및 청결활동 지속 전개
 - ※ 쓰레기관련 민간환경단체와 연계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
- 4대 시책 24개 실천과제의 효율적 추진 지도
 - 타임스케줄 대비 추진사항분석 및 문제점 해결 지원
 - 기관별 추진상황 정기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 2월중순 24개 실천과제 민·관 합동 확인 평가(특별교부세 20억 확보)
- 아름다운 환경조성 사업 추진
 - 농협이 주체가되어 동전모으기운동 1/15부터 대대적 전개 : 모금목표액 30억(한경,KBS 후원)
 - 모금한 돈으로 꽃동산, 꽃길조성사업 추진(꽃동산1,950개소 930.9km² 꽃길2,642개소 4,370km)
- 참가국지원 및 친절도 제고
 - 참가국 지원체계인 Supporters 구성·운영 : 통역, 응원, 숙박 등 참가국과의 매개체 파악
 - 소요예산 확보 1월중, 시도별 파악 2월말, 특히 비인기국 위주로 지원체계 강화
- 대국민 홍보강화
 - 이벤트성 홍보대상을 발굴하여 집중홍보
 - 신문에 고정란, TV의 기존프로를 최대한 활용 등

共通 7) 電子政府事業의 차질없는 推進 : 531(07-70-59)

가. 指示內容(2001년 8월 7일, 제32회 국무회의시)

- 전자정부 수립은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전자정부는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수립,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 아울러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
- 행정자치부 :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민원 사업을 적극실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5대 민원업무(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혁신 계획 수립
 -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 수립('00.8)
 - 5대 민원업무 선행사업 사업자 선정('00.10, 삼성SDS컨소시엄)
 - 5대 민원업무 처리절차 재설계(BPR) 및 정보공동이용 전략계획(ISP) 수립·완료('01.5)
-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본 사업 추진
 -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정보제공기관에 대해 G4C사업 설명회 개최('01.7.12~14)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LG-EDS컨소시엄)·계약 및 사업착수('01.10.22)
 - ※ G4C사업 실무지원단 및 전자지불, 인증, 법·제도 정비팀 등 19개 협의체 구성·운영중
 - 착수보고회('01.11.1) 및 워크숍('01.11.8~9) 개최
- 국민들이 손쉽게 행정정보습득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 열린정부·정부대표전자민원실·정부대표홈페이지를 「전자정부 단일창구」로 통합 운영('01.7)
 - 호적등·초본 등 인터넷 민원신청 확대 : 20종 ⇒ 28종('01.9)
-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보급('00.12) 및 공개대상민원 확대(1,300여종 ⇒ 1,900여종)
 - ※ 민원처리 공개운영 실적('01.1~11) : 총868,057건 (중앙 50,169, 지방 817,888)
- G4C 사업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부동산등기법 등 80여개 정비대상 법령(법률 20, 시행령 25, 시행규칙 등 37)에 대해 관계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01.9~11)
 - 1단계로 41개 법령(법률 6, 시행령 11, 시행규칙 등 24) 정비 지침 송부('01.11)

다. 向後 推進計劃

- 『전자정부 단일창구(eGov.go.kr)』를 통한 민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 50종('02.1) ⇒ 140종('01.3) ⇒ 400여종('02.10)
- '02.1월부터 출생에서 사망까지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안내지도」(10월까지 4,000여종) 제공
- 이용빈도가 많은 자료의 조기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02.1월부터 주민등록, '02.4월부터 국세완납·사업자등록정보 공동이용 개시
- G4C 사업관련 법·제도 정비
 - 1단계로 41개 법령에 대해서는 2002년도 첫 임시국회 정비 목표로 추진
 - 나머지 법령에 대하여는 추가 협의하여 정비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개정 완료(예정)
- G4C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02.10)를 거쳐 본격서비스 실시('02.12)

※ 「전자정부조기구현 352(07-70-36)」은 동지시사항에 통합하여 추진중

共通 8) 年末公職紀綱 確立 등 : 543(09-70-61)

가. 指示內容(2001년 11월 27일, 제51회 국무회의시)

- 연말공직기강 확립 등
 - 연말연시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감찰활동 강화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공직기강 감찰계획 수립 장관께 보고(12.7)
 - 지방공직사회에 실질적인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2001.12.17~ 2002. 2.15기간중 실시
-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시 공직기강 점검 지시(12.19)
-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점검 1차 감찰 실시(12.17~12.31)
 - 복무감사관실 5개팀 20명 구성
 -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계약·인사비리 및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 중점 점검

다. 向後 推進計劃

- 연말연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점검 지속 실시(2~3차)
 - 2차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감찰 : 2002.1.9~1.23
 - 3차 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 감찰 : 2002년 2월중
- 주요점검 내용
 -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계약, 인사비리와 민생현안 방치 등 복지부동 사례
 - 도시계획 등 취약분야 및 자치단체 소속 의료원·보건소 비위실태
 - 설연휴를 맞이하여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